

# 촛불에서 드러난 어느 노조간부의 고백에 대한 코멘트

채진원  
경희대학교

## I. 어느 노조 간부의 고백

지난 2008년 6월,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미국산 쇠고기수입정책에 대해 광우병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문제제기로 개화되었던 촛불시위가, 마침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새로운 시민권력(civic power)의 발견'으로 최절정에 달했을 때의 일이다. 시민들이 내뿜는 개성과 다양성의 향연 그리고 카니발적 열린공간에 매료되었던 어느 노조간부는 고백했다. 마침내 그는 "시민이 가진 다양성, 노조원은 왜 없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노조원들의 다양성부재'를 현 노조운동이 직면한 중요한 문제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그 노조간부는 공공노조의 신세중부위원장이다. 그의 놀라운 통찰력은 레디앙(7.29)에 소개되었다. 그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동원되지 않은 촛불, 조직되지 않은 촛불, 다양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모인 촛불. 이것이 정답이고 이것이 배후이다. 이러한 다양성과 자발성은 창조성을 끌어냈다. 5월 24일 이전까지 촛불집회를 재미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우리의 관념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손피켓의 문구들, 그 재치발랄함과 창의성들. 내로라하는 명연설가들을 뛰어넘는 재치로 대중을 압도하는 학생과 시민들의 발언들. 번호표를 나누어 주어야만 집회가 진행될 만큼 몰려드는 자유발언자들. 끊임없이 쏟아지는 새로운 구호, 새로운 선전물들. 사진기를 들고 피켓만 찍으러 다녀도 지칠 정도로 집회 자체가 생기 넘쳤다.

그런데 우리 노동조합은? 잠시 우리(노동조합)의 집회와 비교해 보자. 집회의 목적에 대한(때로는 치열하기까지 한) 토론, 조직지침 하달, 조직 동원, 틀에 박힌 집회(민중의례, 십수 년째 비슷한 사람들의 항상 똑 같은 발언, 너무 익숙해져서 아무런 감흥도 일으키지 않는 민중가요 부르기, 공연 한 토막, 결의문 낭독). 이제는 선전조차 동반하지 않고 시민들에 대한 홍보방송조차 하지 않는 따분하고 무의미한 행진, 그 과정에서 조화된 대부분이 빠져나간 후 진행되는 마무리 집회…… 너무 심하게 표현했지만,

그래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노동자도 국민이고, 시민이다. 아니 노동자가 국민과 시민의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국민과 시민에게 있는 다양성이 왜 우리 조합원들에게는 없는 것일까?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외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민주와 자유, 노동해방과 진보를 부르짖는 우리들이 한편으로는 또 다른 획일주의를 양산해 오고 그것에 익숙해져 있던 것은 아닐까?

참으로 놀라운 성찰이다. 이상의 고백글에서 신세종부원장이 제기한 질문은, 우리에게 네 가지를 해명하거나 이론적으로 검토해 볼 것을 촉구한다. 첫째, 시민이 가진 '다양성'은 무엇인가? 둘째, 시민들이 가진 다양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노조원들의 '활동'은 무엇으로 개념정의 할 수 있는가? 셋째, 노조원들도 시민적 다양성을 드러낼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이다. 넷째, 노조원들이 시민적 다양성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해법모색일 것이다.

## Ⅱ. 시민들의 다양성과 노조원들의 획일성

신세종부원장이 제기한 질문들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쉬운 접근방식으로 일찍이 신부위원장과 같은 고민을 해온 여러 사람들 만나보는 것이 좋지만, 그중에서도 한나 아렌트(H. Arendt)라는 미국 정치학자의 의견을 경청해볼 필요가 있다.

아렌트는 먼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노동' (labor)과 '작업' (work), 그리고 '행위' (praxis: action) 세부분으로 나누고 거기서 최고의 것을 '행위'로 위치시켰다. '행위'는 고대 자유시민의 삶의 형태로 자신의 '말'과 '행위'를 통해 개성을 드러내면서 '자유' (freedom)를 느끼는 즉, '인간됨' (human)을 표현하는 '정치적 행위' (정치적인 삶)를 뜻한다. 그리고 '행위' 밑에 있는 '노동'과 '작업'은 고대의 노예와 장인의 삶의 양태로, 먹기 위해 살아가야만 하는 인간형인 노동적 동물(animal laborans)과 이윤을 위해 자기 삶을 소비하는 제작인(homo faber)의 삶을 상징한다. 즉, 타인의 삶과 목적을 위해 자신을 노예화하거나 이를 정당화(수단화)하는 '도구적 행위'를 말한다.

다시말해서, 아렌트는 인간이 생물학적인 존재로서 신진대사를 통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먹이를 구하기 위한 일(예, 사냥, 식물채집)을 '노동'으로 생각하였고, 일(활동) 가운데서, 직접적인 신진대사와는 다른, 보다 항구적인 물건을 만드는 일(예, 기계생산, 도시건설, 사회제도화)을 '작업'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아렌트는 오직 '행위'만을 '인간적인 것'으로 존대하였는데, 왜냐하면, 행위의 속성

을 '다양성' (plurality)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즉, '행위' 곧 '정치적 행위'는 1인이 다수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man이 아닌 men)의 '말'과 '행위'가 대화로 소통되면서 열리는, '공감된 세계' (공적영역)속에서의 '공동행위'를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로 그러한 시민들간의 공동소통과 행위의 장이 공적영역으로 드러났으며, 그것의 예가 그리스의 '폴리스'였으며 로마의 '공화국' 그리고 '1871년 파리코뮌'이라는 것이다.

자유시민이 공적영역에서 '정치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적인 것' (the private)이 안정되었기 때문이다. 즉, 사적인 것이란 시민 개인의 '가정경제' (oikos)의 일로, 주로 노예와 여성 등에 의한 '생식'과 '노동'의 공간을 말한다. 다시말해서 자유시민들은 안정적으로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초월하여 인간됨을 표현하는 '정치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인 것=공적인 것, (가정)경제적인 것=사적인 것으로 단순화되었던 고대세계의 개념쌍 구조는 근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기초한 국민경제국가로 전환되면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 핵심에는 '사회적인 것'의 등장(the rise of the social)이 있다. '사회적인 것'이란 '자본-임노동 관계'의 전면화로, 과거 사적인 영역에 속해 있던 경제가 근대와 더불어 국가적 차원에서 공적관심의 대상이 되어버린 역사적 과정을 지칭한다. 즉, 사적이었던 경제행위가 '사회적인 것' (the social)으로 공적인 관심을 획득한 것을 말한다.

'사회적인 것'의 등장으로 가정에 묶여있는 노예들과 여성들이 '근대적인 임금노동자'로 해방되었다. 하지만, '사회적인 것의 등장'에 따라 공적영역의 구조에도 변동이 왔다. 즉, 공적영역에 '사회적인 것'이 침투함에 따라 이전에 분명했던 공(公)과 사(私)의 경계가 무너졌다. 그럼으로써, 결국 진정으로 '공적'이고, 진정으로 '정치적인 것'이었던 '행위'가 공적인 관심에서 멀어지고 망각된 점이다. 그 결과 인간 최고의 가치였던 '정치적 행위' (action)가 자본-임노동이라는 경제 및 계급논리에 밀려 '노동' (labor)과 '작업' (work)에 비해 후순위로 전복되었다. 그것에 따라 말과 다양성을 기초로 드러났던 공적영역의 가치가 축소되고, 그 대신에 '정치적 다양성'을 부정하는 하나의 획일화된 관점과 표준화된 척도가 그를 대신했다.

따라서 '현대의 정치'는 다양한 사람들이 말과 행위를 통해 자신의 개성을 자유롭게 드러내면서 소통의 장을 펼치는 '행위' (praxis: action)가 사라지고, '노동' (labor)과 '작업' (work)의 속성에서 나오는 목적달성을 위한 '합목적적인 도구적 행위' (기획, 계몽, 동원)로 변질되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공학' (즉, labor와 work의 정치적 버전)으로 대체되었다.

특히 정치공학의 대표적인 예로, '맑스주의'와 '사회주의'가 자본의 폐해를 '노

동'으로 대체함으로써, '행위'를 최고의 가치로 복원하는 데 실패했다. 즉, 다양한 사람들의 개성이 드러나는 '정치행위'가 '노동'의 속성(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행위)으로 환원됨으로써, 결국 정치적 다양성과 개성을 계급과 이념으로 환원하여 획일화하는 '전체주의'를 주조함으로써, 인간됨을 기초로 드러나는 대화와 소통의 공적영역을 복원하는 데 실패했다.

따라서 아렌트는 이같은 '정치공학'으로는, 사회적인 것의 전면화에 따라 축소되고 망각된 '공적영역'을 복원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대안으로 '말'과 '행위'로 인간됨을 드러냈던 자유시민들의 '행위' 개념을 현대에 되살려 공적영역과 정치적인 것을 복원할 것을 촉구한다.

인간 삶을 바라보는 아렌트의 이같은 '노동'(labor)과 '작업'(work), 그리고 '행위'(praxis: action)개념들과 그것들이 추구하는 세계를 거울삼아 비춰볼 때, 신세중부위원장이 던지는 첫째, 둘째 질문에 대해 어느 정도 답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시민의 다양성이란 무엇이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시민이 가지는 '다양성'이란 인간 삶의 최고의 형태인 '행위'(praxis: action)의 속성에서 나오는 것으로, 자신의 '말'과 '행위'를 통해 개성을 드러내면서 '자유'(freedom)를 느끼는 즉, '인간됨'(human)을 표현하는 '정치적 행위'(정치적인 것)를 뜻한다. 즉, 시민적 다양성을 드러내는 행위의 핵심은 '시민적 대화활동'이다. 시민들은 '시민적 대화활동'을 통해 도시공학적·경제적인 '물질적인 세계'가 아닌 '말'과 '행위'가 소통되면서 열리는, '공감된 세계'(공적영역)를 창조하고 그 속에 있을 때 인간됨을 느낀다. '시민적 대화'가 다양성을 드러낼 수 있는 이유는 '행위'가 목적·수단에 얽매이는 도구적인 속성을 가진 '작업'(work)과는 다른 '목적 그 자체'를 추구하는 '자유로운 행위'이기 때문이다.

둘째, 그렇다면 노조와 노조원들의 노조활동은 무엇이며, 어떤 속성을 갖는가? 이것은 작업(work)에 해당한다. 즉, 노조가 노동자의 사회경제적인 이익과 권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했고, 노조 지도부의 활동들이 대체로 노조원들을 계몽(교육)하거나 조직화하기 위한 '목적의식적 활동'의 대상으로 하는 목적·수단관계에 들어온다는 점에서, 작업(work)에 해당한다. 그것의 특징은, 목적달성을 위해 그 대상이 되는 노조원들이 집단적(집합적)이고, 조직적(효율적)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다양성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 특히, 노조의 집단행동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다양한 개성과 자유로운 의견을 드러내면서 형성되는 네트워크와 대화속에서 발견되는 인식공동체라기보다는 거꾸로 시민적 다양성을 '임금노동자'라는 속성으로 환원하여, 노동자들의 통일성을 위해 지도부, 기획, 전술, 지침, 조직화, 동원 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어찌보면 노조활동에서는 '획일성'은

어느 정도 당연한 것으로 이해된다.

### Ⅲ. 노조원들은 시민적 다양성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렇다면, 노동자들은 자유시민들이 해왔던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일까? 즉, 노조원들은 '확일성'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도 아렌트의 의견을 들어보자.

아렌트는 '노동운동'에 대해 이중적으로 보고 있다. 그는 경제적 노동운동인 '노동조합운동'(trade-union movement)과 '정치적 노동운동'(the political labor movement)으로 구분하였다.

즉, 아렌트는 경제적 노동조합운동을 작업(work)의 영역으로, 즉 정치적이지도 않고 혁명적이지 않은 '비(非)정치적인 것'(unpolitical)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아렌트는 1848년의 프랑스혁명에서 1956년의 헝가리 혁명에서처럼, 노동계급이 노동자의 사회·경제적인 해법을 요구한 '경제·사회적인 노동운동'이 아닌 오로지 '새로운 정부형태'(a new form of government)의 형성을 통해 시민적 자유를 드러낸 사례만을 '정치적인 노동운동'이라고 보면서 '행위'(praxis: action)의 영역이라고 보았다.

특히, 그는 1871년 파리코뮌을, 자코뱅당이 시도했던 1789년 프랑스 혁명과 비교하여 그 차이성을 부각하였다. 즉, "혁명의 목적이 자유(freedom)이고, 반란의 목적이 해방(liberation)"인데, 파리코뮌의 경우엔 '자유'이고, 프랑스혁명의 경우엔 '해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같이 본 이유는 해방(liberation)은 인간 삶의 필연성의 영역인 노동(labor)과 작업(work)에서 벗어지는 빈곤과 전제정 등 '필연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유(freedom)는 행위(praxis: action)가 발현되는 공적 공간에서의 자유와 공적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유는 동등한 사람 사이에서 공동행위와 공동권력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공적 자유(public freedom)를 말한다.

아렌트가 1789년 프랑스 혁명을 '자유'가 아니라 '해방'이라고 보았던 이유는 혁명과정에서 자코뱅당과 로베스피에르가 시도했던 것처럼 사회적 빈곤해결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연적으로 '인간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폭력과 공포'라는 비정치적인 행위(즉, 정치공학)를 동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1871년 파리코뮌의 경험처럼 '새로운 정부형태'라는 이름으로 발현되었던 '정치적인 노동운동'과 대칭되는 개념인 '경제·사회적인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은 사회를 대표하는 정치제도를 개혁함으로써 사회개혁을 바랬다는 점에서 결코 혁명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노동계급의 정당’ (the political parties of working class)은 거의 대부분 이해관계 정당(interest parties)이었으며 다른 사회계급을 대표하는 이익정당과 결코 다르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비판하는 이유는 아렌트가 노동운동의 경제·사회적 동기를 부정하거나 정당의 역할을 무의미한 것으로 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조합과당이 “결국 노동계급의 근대사회로의 통합, 특히 경제적 보장, 사회적 위신 그리고 정치적 힘의 엄청난 성장”에 일정 부분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정치적 행위가 드러나는 새로운 정치적 공간(the political space)을 창설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혁명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다.

그가 보기에, 노동운동의 초기 단계에서 노동자의 열정은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획득한 경제적 이익을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성숙한 정치투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라는 점에서 “인간으로서 말하고 행위(praxis: action)하는 유일한 조직”으로 노동운동의 정치적·혁명적 역할을 새로운 정치적 공간을 창설하는데 그 비중을 두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다른 이익집단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기득권과 사회적 특권을 요구하고 있어 노동운동의 정치성(the political)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노동운동이 1871년 파리코뮌, 1917년 러시아 소비에트, 1956년 헝가리 평의회 등의 경험처럼, 정치적 자유를 위한 정치공동체의 창설이 아니라 더 많은 임금과 여가시간만을 위해 존재하는 경제적인 이익운동으로 전락하였다는 것이다.

이상의 언급에서 볼 때, 노조원들은 2008년 촛불공간에 자발적 개성으로 참여한 시민의 한 사람처럼, ‘시민적 다양성’을 드러낼 수 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조건적으로 1871년 파리코뮌이라는 정치공동체를 창설했던 것과 같이, ‘경제·사회적인 노동운동’ 수준이 아니라 오로지 ‘새로운 정부형태’ (a new form of government)의 형성을 드러내려는 ‘정치적인 노동운동’ 선상일 경우에만 그렇다는 점이다.

#### Ⅳ.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노조원들의 시민적 다양성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핵심은 노조원들의 ‘시민적 대화능력’의 활성화를 통해 ‘공동세계’를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다. 크게는 세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노동조합이

가지는 작업(work)의 성격상 노조원들의 집단주의적 획일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노조가 시민적 다양성을 드러내는 데 일정한 한계를 노정한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노조원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개성들이 아래로부터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조의 위계적인 대의구조를 수평화하고 쌍방향소통구조로 변화시켜 노동조합내 '토의민주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 토의민주주의가 작동될 때, 노조내 시민적 대화활동이 살아나고, 특정 정파에 포획된 특수이익들이 다수의 보편적 이익, 또는 공동선을 향한 의사결정으로 전환될 수 있다.

토의민주주의는, 일반적으로 어떤 선호(이익)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안이 가장 '합당한 이유'에 의해 지지되는가에 따라 의사결정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대화와 토론 및 합의형성을 중요시한다. 즉, 의사결정은 다수결에 의해 정당화되기보다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간의 '대화'와 '공적인 토의'를 통해 타인들의 의견이 발견되고, 수용될 때 정당화된다고 본다.

둘째는 노조외에 다른 '소통공간'에 참여해야 한다. 시민적 다양성이 노동조합의 틀 내에서는 하나의 집단적 노동자성으로 환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른 대화공간이 필요하다. 특히, 시민이 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르주아'가 된다는 점이 아니라 '시민적 대화능력'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시민단체와 연대하거나 그런 단체에 회원이 되어 소통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시민적 대화활동에 의해 열리는 공동세계 또는 새로운 정부형태를 구체화할 '정치적인 노동운동'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즉, 정치적인 노동운동이 추구해야 할 모습은 이미 2008년 촛불시위가 보여줬다. 그 핵심은 하나의 계급으로 무장된 몰개성적이고 획일적인 노동자집단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노조원 한사람 한사람이 시민적 다양성을 드러내면서, 시민들간에 '소통과 인식의 공동체' 또는 '자유인들의 네트워크'를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2008년 촛불시위에서 시민들은 1871년 파리로프인의 시민들이 체험한 것처럼, 자신들의 다양한 가치를 드러내는 가운데도, 새로운 정부형태인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제안하였다. 다만 민주공화국을 "민주"의 측면에서 권력의 출처로만 해석하지 말고, "공화"의 측면에서도 적극 해석할 필요는 있다.

일반적으로, "공화"는 공화국의 정체성으로 공화주의(republicanism)로 표현된다. 공화주의는 시민적 대화능력을 구비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면서 공공복리의 실현에 공헌하는 공화국(republic)을 말한다. 따라서 공화국의 존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본요소는 '시민적 대화활동'이다. 공화국은 '도시공학적

삶'과 '경제적 부르주아적 삶'을 초월하여 '시민적 대화활동'으로 운영되는 정치 체제다. 시민들의 대화가 있을 때, 시민들의 정치참여의 자유가 실현된다는 점에서, 그 대화활동은 바로 적극적 자유(freedom)와 동의어이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공화국의 존립기반인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적 대화능력을 가진 실제 국민이 존재해야 한다. 즉, 공화국 시민들이 경제적 불평등과 종속관계에 시달려 있다면 시민적 대화활동은 살아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 자립할 수 있는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공화국이 신자유주의적 경제불평등 체제 도입을 위한 '도구적 정치공학'을 포기하고, 정치영역에 침투해오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이익정치'를, 공공성의 시각에서 심의할 수 있는 '시민적 공론정치'가 부활될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조는 공장안팎에서 '토의민주주의'와 '정치적 공론장'을 꽃피우는데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제도정치권에 감시·견제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그 방식에서도 '정치적인 것'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정치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정치공학'과 '엘리트적 활동방식' 및 '이익정치'를 '소통적인 공론정치'로 바꿀 수 있다.

이상으로 본 글에서는 2008년 촛불공간에서 신세종 부위원장님이 제기한 '시민이 가진 다양성, 노조원은 왜 없을까?'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아렌트의 이론적 개념과 연관시켜 노조원들의 시민적 대화활동에 대해 논의하고 모색하였다.